

재일동포 한인회의 조직 활동 고찰:

민단과 재일한인회를 중심으로*

지충남**

요약

이 연구는 재일동포의 대표 한인회 조직을 분석하였다. 올드커머가 활동하고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뉴커머 중심의 재일본한국인연합회의 조직 구성과 회원들의 조직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첫째, 민단은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재일한인회는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다. 두 단체는 생활자 단체, 친한 성향, 재일동포를 위한 대외 활동의 전개, 재일동포와 일본인 간 공존공생의 추구, 한국 국적 보유자 중심의 조직 활동이라는 공통점 있지만, 올드커머 대 뉴커머, 한·일 간의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소극적 대처라는 차이점이 있었다. 둘째, 만족도 조사 결과,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의 조직참여에 부정적, 조직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 예산집행의 투명성,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 한다 등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외한 3개 문항에서 민단의 평균점이 높게 나왔다. 셋째, 조직 활성화의 관건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시스템 구축, 조직의 정체성 홍보 및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영입, 독립적인 재정의 확보이다. 넷째, 일본 사회에 대한 재일동포의 영향력 확대, 친한 성향 조직의 일원화된 한인회 구축, 단체 간 통합의 유용성을 고려한다면,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조직적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는 두 조직 간 경쟁의 지양, 민단 조직의 고령화 문제 및 젊은 세대의 회원 영입,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의 새로운 동력원 확보 등 조직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재일동포, 민단, 재일한인회, 조직 활동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jjcnam1130@hanmail.net

I. 서론

1. 문제제기

세계 각국에 강제이주, 노동이주, 자발적 이주, 유학, 기업 상사원 등 다양한 이주 특성을 갖고 정착한 재외동포들은 그들의 거주 국가에서 한국인의 자생적 단체인 ‘한인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예컨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중국한국인총연합회,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재영한인회, 일본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재일본한국인연합회(이하 재일한인회) 등이 동포들의 권익 보호, 친목 도모, 모국 및 거주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일본에는 약 90여만 명의 올드커머(old comer)와 뉴커머(new comer)가 거주하고 있다. 한인회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친한(親韓)과 친북(親北) 성향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재일동포의 국적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귀화), 조선적(朝鮮籍) 등 다양하다. 조선적 보유자는 무국적자이다(변화영 2011, 227). 1946년과 1955년 단체를 결성한 올드커머 중심의 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2001년 창당한 뉴커머 중심의 재일한인회 등 3개 단체가 재일동포 및 회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회원은 명목상 민단 32만명, 조총련 5만명, 재일한인회 8천명 등으로 추산된다.¹⁾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일동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모국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민단과 재일한인회로 제한하였다. 두 단체의 특징은 첫째, 재일동포들의 생활자(生活者) 단체이다. 둘째, 민단은 올드커머, 재일한인회는 뉴커머 회

1) 민단 38만명, 재일한인회 5만명, 조총련 1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회원은 그렇지 않다(서울신문 13/07/06, 13).

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중앙 및 지방 정부,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재일동포들의 영향력 행사에 있어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한국 정부와 재일동포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지충남 2008b, 59; 지충남 2013a, 72). 다섯째, 재일동포 자격을 갖고 있다면 회원 가입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여섯째, 민단은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만, 재일한인회는 지방마다 독립된 한인회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²⁾ 일곱째, 민단 회원은 세대 별로 월 1,000엔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재일한인회의 일반회원은 현재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조직 구조와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분석할 것이다. 두 단체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대표 한인회’라는 주도권 경쟁과 함께 조직 내부에서는 회장 선임, 조총련과의 교류, 산하단체의 분리 주장 등을 둘러싼 내홍을 겪었다(지충남 2013a, 72-73). 그리고 회원들의 낮은 참여와 감소 등으로 조직 또한 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약화는 일본 사회에서 재일동포의 영향력 약화와 관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단체의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활성화의 토대는 조직 내부의 개혁과 함께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설문은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본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원을 활용하여 대면조사를 통해 민단 회원 106명과 재일한인회 회원 102명 등 총 20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³⁾ 소속 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태동 배경; 둘째, 조직 구조; 셋째, 주요 활동;

2) 뉴커머 한인회는 도쿄의 재일한인회 외에도 오사카의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후쿠오카의 규슈한국인연합회, 나고야의 중부한국인연합회, 요코하마의 재일본한국인연합회 등 5개 뉴커머 한인회가 있다.

3)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비확률표집 중 임의표집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의 어려움; 둘째, 설문의 조사대상은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으로 단체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보유와 대표성 확보의 가능; 셋째, 해외 조사에서 단기간의 조사기간 그리고 설문조사자의 인력 동원 및 응답자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섯째,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9개 문항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했으며, 여섯째,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조직 발전과 회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재일동포 단체에 관한 연구는 민단과 조총련 관계를 다룬 연구(朴慶植 1989; 八·一三裁判記録再刊委員會 2006; 李瑜煥 1971; 李瑜煥 1980; 統一日報編輯部 2006; 강희봉 2008, 190-195; 지충남 2008a, 215-230; 정갑수 2000, 25-40; 진희관 2003, 127-155; 진희관 2006, 1-8; 진희관 2009, 211-239; 정진성 2009, 283-321; 김태기 2003, 38-49; 이종원 2004, 189-200; 김영의 2011; 이승하 2012, 369-398; 임형백 2013, 43-56)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민단과 조총련의 분열, 문제점, 재일동포 사회의 갈등 요인과 해소 차원에서 상생 방안이나 민족단체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민단이나 재일한인회를 분석한 연구(鄭哲 1967; 박병헌 2007; 朴炳憲 2011; 정진룡 1984; 임영언 외 2010, 135-167; 정몽주 2008, 1-13; 성기중 2007, 1-29; 지충남 2008b, 57-93;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13; 김태기 2000, 60-97)는 단체 활동, 네트워크, 모국정부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지충남(2010, 189-214)의 민단 단세에 대한 문헌 연구, 지충남(2013a, 71-100)은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대외적 단체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민단, 조총련, 재일한인회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한

4) 조직 만족도는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이 조직 운영이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외연의 확대와 관련된 인지를 뜻한다. 조직 만족도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를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한편, 문항의 타당도는 ‘안면 타당도’를 활용하였다. 재일동포 사회를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 2명과 민단 동경본부의 사무국장, 재일한인회 사무국장 등 4명의 전문가에게 조직 운영 문항의 타당성을 의뢰하여 검증받았다.

인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단체의 형성과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설문을 통한 단체 의식, 지역·국제·모국연대 등의 단체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임채완 외 2007, 103-168; 윤성석 외 2006, 123-202; 임채완 외 2008, 167-240). 그러나 이들 연구는 조직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아니었다.

민단은 일본사회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백서를 발간했으며(在日本大韓民國民團 1984),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민단의 입장을 100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된 단행본을 출간하였다(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組織局 1996). 또한 민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단체 활동과 사건을 다룬 단행본(在日本大韓民國民團 1997), 민단 50년의 역사를 도표로 수록한 일본어 요약본 책자를 발행하였다(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1998). 1990년 중반에는 민단의 단세 약화에 따른 '조직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민단의 과제, 미래의 방향, 의식 실태 등을 발표하였다(在日本大韓民國民團在日韓國人意識調查委員會 2001). 한편 재일한인회는 2011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업적과 과제를 다룬 자료집을 발간했다(재일본한국인연합회 2011). 민단과 재일한인회가 발간한 자료는 단체 활동의 업적을 회원 및 일본 사회, 모국정부에 홍보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재일한인회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론 및 문헌을 통한 연구가 많은 반면에 경험적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며, 민단과 조총련 관계, 올드커머 단체인 민단의 활동, 모국 정부와의 협력, 두 단체의 홍보를 위한 발간물 등에 치중한 결과물이 많았다. 이 연구는 이론과 실증을 통해 민단과 재일한인회 조직과 활동을 고찰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를 분석하여 조직 활성화 및 한인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뉴커머 단체인 재일한인회에 대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며,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재일동포 한인회가 일본 사회 및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대표 단체이며, 단체 활성화의 초석은 조직 운영의 정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민단과 재일한인회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조직구조와 주요 활동

1. 민단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 재일동포들은 10월 민족권리의 쟁취를 목표로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을 조직하였다(李瑜煥 1971, 7; 곽진오 2007, 97; 최영호 2013, 11). 그러나 조련의 지도부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자 내부에서 지나친 좌 편향의 표출에 대한 우익의 반발,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으로 민족주의 성향의 청년들이 조련에서 탈퇴하였다. 이들은 11월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이하 건청)'을 결성하였고, 위원장으로 박 열을 선출하였다(아마다 쇼지 2003). 한편 민족청년단체인 건청 이외에도 일본에서 동포들의 반탁운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에서 1946년 1월 '신조선건설동맹(이하 건동)'이 만들어졌다. 건청과 건동은 조련과의 대결, 재일동포 우익의 결집을 목표로 반공,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로 1946년 10월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발족하였다(在日本大韓國民團 1997, 25; 최진욱 외 2004, 17-18; 지충남 2013b, 125).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9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단체명을 개칭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재일민단을 재일동포의 유일한 공인단체로 인정하였다(박일 외 2005, 166). 이후부터 민단은 한국의 국시(國是)를 준수하고, 6대 강령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⁵⁾

5) 민단의 국시는 자유, 민주주의, 남북 평화통일의 지지를 의미하며, 6개 강령은 대한민국의 국시 구현, 재일동포의 인권옹호, 경제발전, 문화진흥, 일본 지역사회의 발전, 세계평화와 국제친선 등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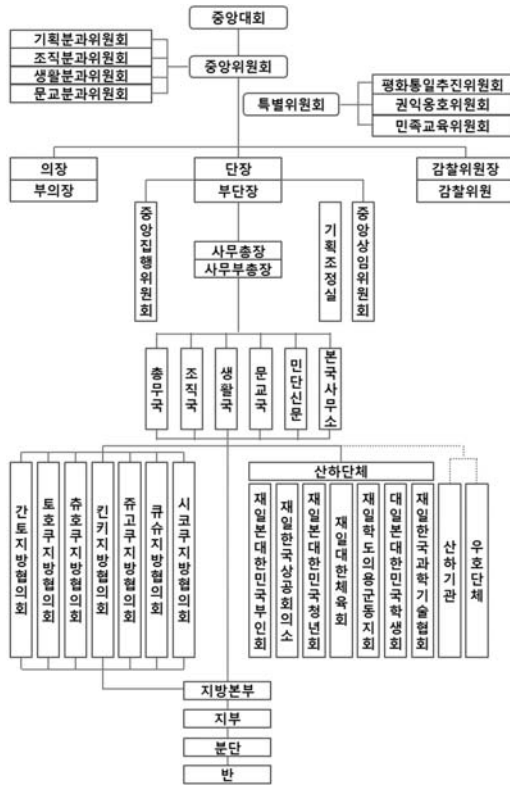
민단의 조직 구성은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간토(關東), 도호쿠(東北), 주호쿠(中北), 긴키(近畿), 주고쿠(中國), 규슈(九州), 시고쿠(四國) 등 7개 지방협의회, 49개의 지방본부, 317개의 지부, 289개 분단, 2,454개의 반(班), 7개의 산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⁶⁾ 먼저 중앙본부의 조직 구성을 보면 집행·의결·감찰기관의 빅3 기관장으로 상징되는 단장, 의장, 감찰위원장을 선출하고, 민단의 중요한 정책과 활동을 결정하는 중앙대회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대회는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찰기관, 특별위원회 차례로 집행하였던 사업성과를 발표한다. 타 기관의 보고 내용은 상세하지만, 감찰기관 보고와 관련하여 ‘회계관계’는 “중앙본부의 일반 회계 및 본국 보조금의 회계감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회계 관계 감사결과는 하등의 상위(相違)없었음을 보고한다.”는 내용이다(在日本大韓民國團中央本部 2005, 141). 문제는 예·결산 집행에 대해 세입과 세출 항목을 구분한 대차대조표 형식의 예산 보고가 아닌, 그냥 이상 없다는 단 4줄의 문건 보고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담당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결산 집행의 투명성을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중앙대회에서 빅3를 선출하는 대표들은 민단 중앙본부가 산하단체 및 지방본부에 의뢰하여 총 1,219명 이내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在日本大韓民國團 2006, 36; 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13, 113).⁷⁾ 중앙대회 밑에는 민단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심의·결정하는 중앙위원회가 있다. 중앙위원회는 기획·조직·생활·문교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6)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민단의 단세현황.” <http://www.mindan.org/kr/sosoki04.php>(검색일: 2013.04.10) 참조.

7) 중앙위원 205명, 대의원 345명, 선거인 669명이며, 중앙대회 선거인의 자격 및 선정은 중앙위원 및 대의원을 제외한 산하단체중앙본부 부회장과 감사, 지방본부 3기관장임원과 사무국장 및 산하단체 회장, 지부 3기관장이 선거인이 된다. 단 투표의 가치는 중앙대회 선거인의 투표가치는 10표를 중앙위원·대의원의 1표로 한다.

〈그림 1〉 민단 조직도



출처: 재일본대한민국민단(2002); <http://www.mindan.org/kr/shokai04.php>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1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통일문제를 협의하고 홍보하는 평화통일추진위원회, 재일동포의 권익 문제를 논의하는 권익옹호위원회, 교육부문을 다루는 민족교육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중앙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단은 2012년 2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강령에 “일본 지역사회 발전을 꾀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일본 국적 취득자도 지부 단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하였다. 또한 재일한국상공회의소에 대해서는 민단 부단장이 이 조직을 직접 지휘하는 ‘직할 조치’를 통해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재외동포신문 12/02/24, 3).

중앙위원회 밑으로는 단장, 의장, 감찰위원장이 있다. 단장은 임기 3년으로 민단을 대표하는 직책이며, 5명의 부단장이 있다. 2013년 현재 민단은 오공태(鳴公太) 단장이 이끌고 있다. 민단의 행정 부문을 총괄하는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무국, 조직국, 생활국, 문교국, 민단신문, 본국사무소 등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본부의 조직은 7개 지방협의회, 지방본부, 지부, 분단, 반(班)으로 조직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간토 지방협의회 의 산하 12개 지방본부 가운데 군마(群馬)의 경우는 지부, 분단, 반, 조직이 해체되어 활동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규슈 지방협의회는 9개 지방본부에서 가고시마(鹿兒島), 쓰시마(對馬島), 오키나와(沖繩)에 지부가 없으며, 시코쿠 지방협의회 4개 지방본부 가운데 에히메(愛媛)를 제외한 카가와(香川), 고우치(高知), 도쿠시마(徳島)에도 현재 지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의결기관은 임기 3년의 의장 1명, 2명의 부의장 그리고 규약위원회와 작업부회로 구성되어 있다. 감찰기관은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감찰위원이 있으며, 회원의 징계, 회계 및 집행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2005, 45). <그림 1>에 민단의 조직도를 설명하였다.

민단 하부 조직의 동력이 지방협의회라면 또 다른 축은 7개의 산하단체이다. 첫째,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이다. 재일동포 기혼 여성들이 회원이며, 상호친목과 협조로 일치단결하여 재일동포의 권익 옹호, 민족교육, 한국 정부와 민단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9개 지방본부와 300개 지회를 두고 있다. 둘째, ‘재일한국상공회의소’는 재일동포 기업인, 자영업 종사자, 금융 관계자 등 사업과 생계를 영위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재일동포 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지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민단이 주도하는 기부 및 봉사활동에 경제적 지원과 후원을 맡고 있다. 셋째, 1977년 설립된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는 만18세~30세의 재일한국청년들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민단의 정책을 옹호하며, 차세대 육성에 주력하면서 청년 상호간 친선도모 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넷째, 1947년 결성된 ‘재일대한체육회’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를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개최되는 모국 경기의 후원과 지원 그리고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재일동포 선수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다섯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한국전쟁 당시 민단을 중심으로 모국에 학도병을 참전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여섯째, ‘재일본대한민국학생회’는 1981년 결성되었다. 일본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의 친목 및 정보 교류 단체로 민단 중앙본부는 장학금 지원과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곱째, 1984년 결성되었지만 민단의 산하단체로 1994년에 인정받은 재일한국과학기술협회는 공학, 농림, 수산, 의치학 등 자연과학을 전공한 전문가 단체이다.

2)

민단이 주력하고 있는 조직 활동은 지방참정권, 조직 활성화, 차세대 육성, 자립재정 확립, 재일동포 지원 등 5개 분야이다.⁸⁾ 첫째,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의 전개이다. 재일동포가 일본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徐龍達 1992; 仲原良二 2000)는 논리에서 민단은 1994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방참정권운동을 펼쳐왔다. 2000년 11월, 의회에서 참정권운동 법률안이 채택 직전까지 갔었지만, 보수 정당의 반대로 계류되었다. 2001년 코이즈미(小泉)정권의 등장과 함께 자민당 집행부가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외국인참정권 부여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이 부각된 결과(김용기 2009, 1),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면서 의회에서 심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단은 2003년도에 지방선거 참정권의 입법화를 위해 중앙본부에 ‘참정권획득운동본부’와 지방본부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일본 국회의원에

8)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민단의 주요활동.” <http://www.mindan.org/kr/jigyo02.php> (검색일: 2013.04.10).

대한 진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보내 자치단체의 50% 이상이 동참하는 운동을 추진하여 전체 3,302개의 자치단체 중 45.7%에 달하는 1,510개의 자치단체에서 ‘영주외국인참정권’ 입법화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최영호 2004, 131; 임채완 외 2007, 128). 그러나 자민당 소속 현의회 의원들의 외국인지방참정권 법제화 반대 의견서 채택 운동의 전개, 전국 도도부현의회 의장회(全國都道府縣議會 議長會)는 정부가 지방참정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특별결의서 채택, 지방의회의 반대 의견서 채택 증가, 우익단체의 반대 여론의 증가, 일본에 적대적인 국적을 가진 영주외국인이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부에 대한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안보 위협론의 제기,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과 함께 재일중국인의 급격한 증가와 상대적 지위 향상에 따른 경제 위협론의 등장은 재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법제화를 어렵게 만들었다(김태기 2010, 264-268). 현재의 상황은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추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단 내부에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병폐가 표출되면서 의사소통의 단절, 폐쇄적 조직운영이 나타났다. 지도부는 이를 ‘조직 위기’로 간주하였고, ‘조직개혁’을 매년 민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민단 내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하병옥 단장의 퇴진과정 진 단장의 취임은 2000년대 들어 조직 혼란의 최정점이었다. 정진 단장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 부실 지방조직에 대한 실태 파악, 단원과의 소통 강조 등 조직 재생에 박차를 가한 결과, 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단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의 변화, 즉 재일동포 3~5세대의 다양한 가치관, 재일동포 청년들의 민단 가입에 대한 소극적 태도, 년 1만 명에 달하는 일본 국적 취득자의 증대, 국제결혼에 의한 일본 국적의 취득 등 재일동포 사회의 유동화 현상은 민단 조직의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민단 조직의 활성화는 회원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지부의 활성화가 선

행되어야 한다. 민단은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본부에 년 2회 이상 간부연수의 실시, 동포 가정의 호별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민단 지방본부 산하에는 1곳의 지부가 없는 곳도 있으며, 단원의 감축과 미참여는 지부를 운영하는 필요비용인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민단은 회원들에게 강습회, 어린이 토요일학교, 어머니 교실의 개최로 지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각 지부는 '조직정비위원회'를 개편하고, 기구와 운영, 기능을 재검토하여 지부의 통합과 재편성을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의 재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민단은 비영리적이고 공익을 강조하는 사업에 주력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임채완 외 2007, 129).

셋째, 차세대 육성운동이다. 현재 재일동포 청년층의 민단 참여율은 5~10% 수준이다(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13, 75). 민단은 회원들의 고령화 및 신규 회원 가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육성을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조직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차세대 및 후계자를 민단이 발굴하여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래 민단의 주역을 육성하는 것이다(성기중 2007, 21). 이를 위해 i) 민단은 후계자 육성사업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인 청년회 조직의 강화 및 지부의 설립, 재일동포 어린이잼버리 대회와 모국연수회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 어린이잼버리 대회는 차세대 육성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ii) 4개 민족학교의 지원과 어린이 토요일학교의 확장 및 전국화이다. 참여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iii) 지방본부가 개최하는 어린이 하계·동계 행사, 재일 중·고생과 대학생의 모국 정부 초청사업 파견, 재일동포 차세대 운동선수의 발굴과 모국의 전국체전에 파견하고 있다.

넷째, 자립재정을 확립하려는 지원운동이다. 민단 회원은 세대별로 월 1,000엔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민단은 한국정부로부터 매년 약 78억 원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민단 집행부 임원들의 찬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대행의 중단, 회원들의 월 회비

미납은 민단 재정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단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기본 재정을 회원들의 단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단은 재정 확보의 보조 수단으로 지방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회관의 유료 임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단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 등을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밝은 재일동포사회 구축 지원사업의 전개이다. 민단은 회원 및 재일동포들에게 동포 사회의 대표 한인회로서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회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생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원활한 일본 여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본부 차원에서 한국인여행자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민단은 재일동포가 일본에 확산시킨 불고기(아키니쿠) 식문화를 중심으로 한식 세계화를 위해 각종 축제에서 한국 전통음식 코너를 설치하여 한식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 상호간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민단 집행부가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민단은 재일동포 신세대의 민족정체성 약화, 일본 국적 취득자의 증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민단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지원하고 있었다.

2. 재일한인회

1980년대 말, 한국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한국인의 일본 이주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뉴커머의 수는 증가하였다. 초기의 뉴커머는 풍속(風俗)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았지만, 1990년 이후에는 유학생, 비즈니스,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 등으로 그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마쓰다 도시히코 2013, 362).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한 뉴커머는 약 20여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뉴커머 중 1/3 이상이 도쿄지역에 살고 있으며, 특히 이들 뉴커머를 중심으로 신주쿠에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재일한인회가 결성되기 이전, 재일동포의 대표 한인회는 민단이었다. 뉴커머는 올드커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민단의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 기업 주재원, 유학생 중심의 뉴커머들은 신주쿠 지역의 한국계 상점의 증가를 배경으로 일본에서의 적응과 함께 스스로의 권익을 획득하며, 공동의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리고 뉴커머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0년 12월,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재일한국인사회를 생각하는 모임’을 열어 뉴커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재일한인회’ 조직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재일한인회는 회원의 확대, 회칙의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01년 5월 20일 출범하였다(임채완 외 2007, 145). 이렇듯 재일한인회의 출현은 민단이 뉴커머를 아우를 수 있는 유연성의 부족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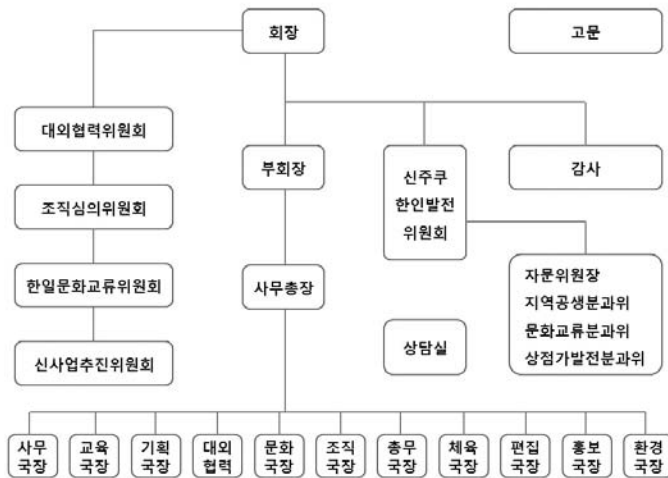
재일한인회의 중요 정책과 활동을 결정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총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예·결산, 회장의 선출 및 해임, 기타 회장 및 이사장이 상정한 안건과 사항 등을 의결하며 회장, 이사장, 감사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총회 아래에는 집행부와 2명의 감사, 이사회가 있다. 집행부를 보좌하기 위해 상임고문 그리고 대외협력위원회, 조직심의위원회, 한일문화교류위원회, 신사업추진위원회, 신주쿠한인발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회장 직할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집행부는 회장, 3명의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부는 한인회 회칙에 준거하며 일본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과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 있다. 재일한인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재일한인회는 제7대 이옥순 회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사무총장의 밑으로는 사무국, 교육국, 기획

국, 대외협력국, 문화국, 조직국, 총무국, 체육국, 편집국, 홍보국, 환경국 등 11개 부서가 활동하고 있다. 2인의 감사는 재일한인회의 재산 상황 및 재정을 상시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사회 조직은 1명의 이사장과 4명의 부이사장, 각 1인의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외에 99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고문 및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 가운데 50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인원은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사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⁹⁾ 회장과 이사장은 재일한인회 회칙에 준거하여 만 40세 이상, 일본 체재 5년 이상, 재일한인회 임원으로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회칙에 준거하며, 총회와 회장 지명으로 선임된 인사로 구성된다.

〈그림 2〉 재일한인회 조직도



자료: 재일본한국인연합회(2011, 66).

9) 재일본한국인연합회(2007) http://www.haninhe.com/korean/sub_kaisoku.php (검색일: 2013.04.28) 참조.

재일한인회의 회원은 정회원(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국적 자), 준회원(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외국국적의 한국인), 명예회원(재일한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 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신청제로 재일한인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2>는 재일한인회의 조직도이다.

2) ¹⁰⁾

재일한인회는 경영 강연회, 무료건강검진, 친선차원의 협력 활동, 한·일 문화교류의 증진, 신주쿠를 중심으로 상인단체 간 교류, 재일한국인에 대한 직업 및 법률 상담 및 도움, 조직의 외연 확대를 위한 대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 홍보 및 상담활동의 추진이다. 재일한인회는 올드커머와 뉴커머를 포함하여 전체 재일동포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옹호하여 재일동포 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이룩하고 한·일 정부 및 민간 교류의 촉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재일한인회’ 신문을 발행했으며, 현재도 주기적으로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재일한인회는 재일동포 간 협력, 재일동포와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 및 친목도모, 뉴커머의 권익옹호와 건전한 일본 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건의 등의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재일한인회는 뉴커머의 ‘생활상담실’을 개설하여 교육 문제, 비자 상담, 인권침해,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조언, 각종 세금 상담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무료 상담을 행하고 있다.

둘째, 교류 활동에 몰입한 활동으로 재일동포와 일본인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주쿠 다문화 공생 포럼의 개최, 오다이바 국제교류 페스티벌 참여, 언어 교환의 날, 조선통신사 성심교린 축제, 한일 축제마당 등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거나 후원

10) 활동의 첫째부터 셋째는 임채완 외(2007, 147-148) 및 재일본한국인연합회; <http://www.haninhe.com> 참조.

하여 양국 국민들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특히 재일한인회는 정부 간 관계보다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보다 많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축제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재일한인회는 체육대회, 간담회 개최 등으로 재일동포 간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편 재일한인회는 지역민 및 상인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산하 조직으로 '신주쿠한인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월 1회의 클린(청소)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일본인 자영업자와 친교하고 있다. 이렇듯 재일한인회는 국제교류 및 재일동포를 위한 문화행사의 추진, 정보의 공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다문화공생'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셋째, 재일한인의 권리 옹호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재일한인회는 다수 뉴커머들의 일상적인 문제, 직장에서 임금 체불, 인권 차별 행위, 부당노동 및 해고, 일본인 집주인의 박해 등의 사안에 대해 법적·제도적 상담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재일한인회는 중국 화교들의 차이나타운과 유사한 성격의 코리아타운 건설을 추진하였다. 뉴커머들의 주된 영업 장소인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신주쿠 구청의 협조를 받아 신주쿠 지역의 쇼쿠안, 오쿠보, 신오쿠보 일대를 코리아 타운으로 조성하였다. 코리아 타운의 형성은 한류 열풍으로 재일한인과 일본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는 일본 극우세력의 혐한시위로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다(경향신문 13/09/09, 9).

넷째, 조직 외연의 확대이다. 동포 사회에서 재일한인회는 민단의 위상과 대등한 인지도를 얻기 위해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였다. 한국 정부 및 주일 대사관을 포함하여 재일단체 및 일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집중하였다. 재일단체로는 동경상공회의소, 재일상공회의소, 재일귀금속연합회, 재일한국중소기업협회,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인 교우주콘, 일본 경제단체인 쇼쿠안도오리 진흥조합 등 다양한 단체들과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단체 외에도 재일한인회는 지방의 뉴커머를 대표하는 4개의 지방 한인회가 출범하자, 이들 단체와 정보의 공유, 재일동

포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등 뉴커머 대표단체의 위상을 높이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Ⅲ. 회원들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인식

1. 인구사회학적 특성¹¹⁾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인은 성별, 국적, 연령대, 출생지,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세대, 직업, 소득수준, 교육정도 등 10개 항목이다. 성별에서 민단과 재일한인회 모두 남성들의 높은 사회활동의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 남성(75.5%, 77.5%) 비율이 높았다. 국적을 보면 민단 회원의 90.6%, 재일한인회 96%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4개의 연령대에서 민단은 40대(49.1%)가 가장 많았지만, 민단의 중추 단원은 60대 이상의 재일동포 2, 3세대이다. 반면에 재일한인회는 30대(35.3%)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단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44.35세, 재일한인회는 38.09세이다. 민단 회원의 다수는 일본(95.3%)에서 출생했지만, 재일한인회는 2명을 제외한 100명(98%)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민단은 올드커머, 재일한인회는 뉴커머가 회원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의 조사 지역은 도쿄이며, 두 단체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각각 도쿄도(86.8%, 89.2%)가 대다수였다. 소수는 도쿄도의 주변에 위치한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거주기간에서 민단은 41~50년(46.2%), 재일한인회는 10년 이하(54.9%)의 거주자 많았다. 평균 거주기간은 민단 42.46년, 재일한인회 11.46년이었다. 다수의 민단 회원은 일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지충남(2013a, 78-80)의 논문을 인용하였음.

본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재일한인회 회원들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고교나 대학재학, 졸업 후 이주하여 거주기간이 짧다. 민단 회원들의 세대는 재일동포 2세대(50%), 3세대(45.3%), 그리고 소수의 한국출신(3.8%)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일한인회는 한국출신(98%)이 다수였으며, 2명(2%)은 재일동포 3세대이다.

회원들의 직업 분포에서 민단과 재일한인회 모두 중소기업경영(34.9%, 23.5%)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직업 분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일본 사회의 폐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회원의 다수는 사업, 자영업,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았다. 소득수준에서 민단은 600만 엔 이상(45.3%)이 다수인 반면에 재일한인회는 500만 엔 이상~600만 엔 미만(23.5%)자가 가장 많았다. 2012년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P)은 약 514만 엔으로¹²⁾ 민단과 재일한인회 응답자의 96.2%와 79.4%는 30대부터 50대 이상으로 경제활동 종사자이다. 민단 회원의 67명(63.2%), 재일한인회 44명(43.1%)의 소득은 국민소득보다 높았다.

교육 수준에서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의 대졸자(44.3%, 42.2%)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집단 모두 98% 정도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의무교육은 총 9년이다. 민단 회원들의 고학력은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과 상관성이 있다. 재일동포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식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교육에 매우 열성적이다. 그 결과, 두 단체 회원들의 상당수가 고학력자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종합하면 두 단체는 공히 남성, 30대부터 50대 연령대, 직업은 자영업 종사자, 고학력자가 많았다. 민단의 주축은 일본에서 출생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일동포 2, 3세대이며, 30년 이상 거주자가 95%, 500만 엔 이상의 소득자가 많았다. 재일한인회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

12) 오정근(13/07/30, 27) 참조.

본에 이주한 한국 국적자가 많았으며, 20년 이하 거주자가 85%, 소득은 500만 엔 이상자가 43%로 민단 회원들의 수입이 조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

	변인	민단	재일한인회	변인	민단	재일한인회
성별	남성	80(75.5)	79(77.5)	농업/어업/임업/축산업	1(0.9)	1(1.0)
	여성	26(24.5)	23(22.5)	소자본자영업	11(10.4)	13(12.7)
국적	한국국적 재일동포	96(90.6)	98(96.0)	중소기업경영	37(34.9)	24(23.5)
	조선국적 재일동포	8(7.6)	2(2.0)	판매/서비스직	16(15.1)	16(15.7)
	일본국적(귀화)	2(1.9)	2(2.0)	기능/숙련공	4(3.8)	3(2.9)
				직업		
연령대	20대	4(3.8)	20(19.6)	일반노동직	1(0.9)	9(8.8)
	30대	25(23.6)	36(35.3)	사무/기술직	22(20.8)	20(19.6)
	40대	52(49.1)	35(34.3)	경영/관리직	2(1.9)	4(3.9)
	50대 이상	25(23.6)	11(10.8)	전문/자유직	5(4.7)	3(2.9)
출생지	한국	101(95.3)	2(2.0)	가정주부	6(5.7)	0(0.0)
	일본	5(4.7)	100(98.0)	기타	1(0.9)	9(8.8)
거주지	가나가와현	3(2.8)	4(3.9)	소득수준		
	도쿄도	92(86.8)	91(89.2)	200만엔 미만	1(0.9)	9(8.8)
	사이타마현	11(10.4)	6(5.9)	200만엔 이상-300만엔 미만	4(3.8)	13(12.7)
거주기간	지바현	0(0.0)	1(1.0)	300만엔 이상-400만엔 미만	20(18.9)	21(20.6)
	10년 이하	2(1.9)	56(54.9)	400만엔 이상-500만엔 미만	14(13.2)	15(14.7)
	11-20년	1(0.9)	30(29.4)	500만엔 이상-600만엔 미만	19(17.9)	24(23.5)
	21-30년	4(3.8)	15(14.7)	600만엔 이상	48(45.3)	20(19.6)
	31-40년	32(30.2)	1(1.0)	교육정도		
	41-50년	49(46.2)	0(0.0)	중졸	3(2.8)	2(2.0)
세대	51년 이상	18(17.0)	0(0.0)	고졸	25(23.6)	29(28.4)
	재일동포2세	53(50.0)	0(0.0)	전문대졸	25(23.6)	21(20.6)
	재일동포3세	48(45.3)	2(2.0)	대졸	47(44.3)	43(42.2)
	재일동포4세	1(0.9)	0(0.0)	대학원졸	6(5.7)	7(6.9)
	한국출신	4(3.8)	100(98.0)	전체	106(100)	102(100)

2. 조직 운영의 비교

1)

민단의 조직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직의 임원진 선출방식이 합리적이다’는 ‘보통이다’(57.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그런 편이다’(32.1%)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은 8.7%에 불과하다. 민단은 ‘중앙대회’를 개최하여 단장, 의장, 감찰위원장 등 3명을 1,219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빅3는 1차례의 연임이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집행부 임원 선출에 있어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이는 어느 선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민단 회원들의 임원진 선출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조직의 단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에 응답한 경우가 49.1%로 가장 높았다. 회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지충남(2010, 198-2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단세의 외적 요인은 귀화자 증가, 세대교체, 뉴커

<표 2> 민단의 조직 운영

N(%)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직의 임원진 선출방식이 합리적이다	2(1.9)	7(6.6)	61(57.5)	34(32.1)	2(1.9)
조직의 단세가 약화되고 있다	1(0.9)	21(19.8)	24(22.6)	52(49.1)	8(7.5)
현재의 조직운영에 만족한다	1(0.9)	22(20.8)	68(64.2)	15(14.2)	0(0.0)
조직발전을 위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0(0.9)	1(0.9)	19(17.9)	67(63.2)	19(17.9)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단절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0(0.0)	21(19.8)	41(38.7)	39(36.8)	5(4.7)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의 조직참여에 부정적이다	5(4.7)	45(42.5)	41(38.7)	14(13.2)	1(0.9)
조직발전을 위해 모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0(0.0)	1(0.9)	22(20.8)	72(67.9)	11(10.4)
예산집행이 투명하다	0(0.0)	5(4.7)	48(45.3)	47(44.3)	6(5.7)
조직은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	1(0.9)	11(10.4)	69(65.1)	22(20.8)	3(2.8)

며 등장이며, 내적 요인은 폐쇄적 조직운영, 귀화자 차별, 지부 활동의 쇠퇴, 소극적 대처 등이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 단원의 감소,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표출, 민족정체성 약화, 의사소통의 단절 등이 표출되어 단세가 약화되었다. 5명 중 1명은 단세 약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의 조직운영에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64.2%로 가장 많았다. 21.8%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지 14.2%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민단은 일본 내에서 재일동포들의 인권, 권리 침해, 복지 향상, 지방 참정권 획득 등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에 진정서 전달, 항의 등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조총련의 한국 및 민단에 대한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원들은 조직 운영의 만족도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 높았다. 다만 조직운영에 대해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불만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조직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조직발전을 위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한다’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63.2%)’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 또한 17.9%로 개혁의 지속성에 단원 5명 중 4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부정적 반응은 1.8%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단 조직 내에서 권위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현상이 만연하자(성기중 2007, 20), 이를 민단 지도부는 ‘조직위기’로 규정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의식, 조직, 재정의 3가지 개혁을 통해 민단 조직을 재생하였다. 매년 조직 활성화를 민단의 주요 활동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기구의 개편, 일본 귀화 동포 및 뉴커머의 회원 가입 가능, 중앙 3기관장 선출 선거의 참여 인원 확대, 지부 및 분단 활동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단의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즉 조직 개혁의 추진 성과를 하부의 단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내부에서 의사소통의 단절현상이 표출되고 있다’는 물음에 ‘보통

(38.7%)'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그런 편이다' 및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41.5%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의사가 조직에 반영되지 않고 차단된다면 회원들의 조직 참여에 대한 무기력과 위축을 양산할 것이다. 특히 민단의 분단이나 반(班) 등 하부 조직의 다수 의견이 지부나 지방본부에서 중앙본부로 전달되는 상향식 시스템이 아닌 하향식 체계로 운영된다면 조직 내부의 불통은 심각하며, 이는 조직의 쇠퇴로 전이될 것이다.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의 조직참여에 부정적이다'는 문항에 회원 10명 중 4명 정도가 '비교적 그렇지 않다(42.5%)'고 답하였다. 민단은 과거에 회원 가입 조건을 올드커머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올드커머의 1세대의 고령화, 재일동포 3~4세대의 민단 참여의 소극성, 매년 평균 1만 명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의 일본 국적 취득, 뉴커머 증가, 열린 민단의 지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현재 뉴커머, 귀화 동포들도 민단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귀화 동포의 민단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직발전을 위해 모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67.9%로 단원 10명 중 8명은 모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현재 외교부가 재외동포에게 지원하는 총액은 116억 2,800만원으로 이중 67%가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75억 원이 민단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민단 중심의 지원에 대해 다른 국가나 지역의 한인단체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민단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자기 국가나 지역의 단체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모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체질에서 탈피하여 민단 스스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양되어야 한다.

'예산집행이 투명하다'에 대해 '보통이다'가 45.3%, '그런 편이다'가 44.3%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은 5%미만이였다. 그러나 회원들의 예산집행 투명성 응답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2013년 1월 외교부의

민단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서 2010~2012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가수금(假受金) 집행, 회계처리 규정 미비 등을 지적받았다.¹³⁾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민단 예산의 집행부분에서 투명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민단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원들의 단비, 한국정부의 보조금, 찬조금을 포함한 민단의 모든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 공개해야 재일동포 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조직은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에서 ‘보통이다’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그런 편이다’(20.8%)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의 단절과 관계되어 있으며, ‘보통’의 응답 빈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조직에서 불통이 있다면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보통’의 응답은 소통의 단절이 민단에서 표출되고 있지만, 그런대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재일한인회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다. ‘조직의 임원진 선출방식이 합리적이다’는 질문에 ‘보통이다’(43.1%)가 가장 많았으며, 차순위는 ‘그런 편이다’(33.3%)로 나타났다. ‘보통’을 제외하면 긍정은 36.2%, 부정적 인식은 20.6%이다. 재일한인회의 회장은 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후보의 자격은 만40세 이상, 일본 체류 5년 이상, 재일한인회 임원 활동 1년 이상이며, 100만 엔의 공탁금을 내어야 한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거나 혹은 단독 입후보의 경우, 추대 형식으로

13) 민단은 친선협회 단체·개인 회비를 보조금으로 납부하는 등 3년간 406만 엔(4천7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2012년도 중앙민단 보조금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2천300만 엔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부실 회계처리로 지적받았다. 2006년 민단 현장점검에서도 보조금을 인건비·비사업성 경비 등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집행 내역의 허위 보고, 영수증 누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미혜 13/03/05).

회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선출을 투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등을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은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직의 단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회원의 52%가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세의 약화는 재일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례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뜻한다. 재일한인회는 2001년 창단하여 현재 12년의 연혁을 갖고 있지만, 회원은 8,000여명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뉴커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신규회원의 영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단세의 약화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대외활동과 관계되어 있다. 일본 우익의 협한시위에 대한 무기력한 그리고 방관자적 태도, 조직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 주도권 경쟁의 표출을 인식한 회원들은 재일한인회의 단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 3〉 재일한인회 조직 운영

N(%)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직의 임원진 선출방식이 합리적이다	4(3.9)	17(16.7)	44(43.1)	34(33.3)	3(2.9)
조직의 단세가 악화되고 있다	3(2.9)	18(17.6)	28(27.5)	42(41.2)	11(10.8)
현재의 조직운영에 만족한다	8(7.8)	34(33.3)	37(36.3)	23(22.5)	0(0.0)
조직발전을 위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0(0.0)	2(2.0)	17(16.7)	51(50.0)	32(31.4)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단절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4(3.9)	19(18.6)	42(41.2)	29(28.4)	8(7.8)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의 조직참여에 부정적이다	30(29.4)	39(38.2)	26(25.5)	6(5.9)	1(1.0)
조직발전을 위해 모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0(0.0)	4(3.9)	14(13.7)	53(52.0)	31(30.4)
예산집행이 투명하다	2(2.0)	17(16.7)	50(49.0)	29(28.4)	4(3.9)
조직은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	4(3.9)	28(27.5)	51(50.0)	18(17.6)	1(1.0)

‘현재의 조직운영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부정적 인식은 41%, 긍정 22.5% 보통 36.3%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조직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의사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장단과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어 하향식 구조로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회원들은 결정된 혹은 집행하는 정책을 그냥 수용할 뿐이다. 바람직한 조직의 의사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체계이다.

‘조직발전을 위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한다’는 문항에 회원 10명 중 8명 정도가 긍정적 반응(81.4%)을 보였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의사소통의 장애, 경직화, 비유연성 등의 관료화와 폐쇄형 조직으로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러한 조직은 내적·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로 전이되어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전면적인 조직기구의 개편, 우수한 인재의 영입, 문호의 개방, 규약의 개정 등을 통해 단체의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조직내부에서 의사소통의 단절현상이 표출되고 있다’에서 ‘보통’은 41.2%, 긍정 36.2%, 부정 22.5%로 의사소통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더 많았다. 조직에서 의사소통이란 정보, 설득, 비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한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활동이다. 의사소통의 단절은 어느 조직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문제는 상·하층부 간 소통의 단절은 조직의 경직성, 폐쇄성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재일한인회 집행부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소통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의 조직참여에 부정적이다’는 ‘전혀 그렇지 않거나, 비교적 그렇지 않다’가 67.6%로 귀화 동포의 회원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9%는 부정적이었다. 재일한인회를 결성한 배경은 민단의 뉴커머 배제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일한인회는 일본에 거

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계 교민을 일반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단과 동일하게 회원 자격을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회원으로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 및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조직발전을 위해 모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모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4명의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체 발전을 도모하는 요인은 회원 수, 재정능력, 단결력 등이다. 재일한인회는 민단에 비해 회원 수, 단체 연한, 활동 측면에서 미약하며, 특히 재정부분은 매우 취약하다. 재일한인회는 임원진의 찬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는 매월 10,000엔, 부회장 및 위원장 30,000엔, 이사장 50,000엔, 회장 100,000엔이다. 일반 회원의 경우, 현재 월 회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 회원들의 월 회비 납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44,000,000원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다. 뉴커머를 대표하는 재일한인회는 대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모국의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집행이 투명하다’는 ‘보통이다’가 49%, 긍정적 인식은 32.3%, 부정적 반응은 18.7%로 회원 다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긍정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 예산 집행에 대해 일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일한인회의 집행부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그리고 일반 회원들은 월 회비 납부 의무가 없는 관계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조직은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는 문항에 ‘보통이다’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인식은 31.4%, 긍정은 18.6%이다. 재일한인회원들의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 반응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직운영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즉 민단과 마찬가지로 재일한인회 조직 내부의 상·하층부 간 의사소통의 단절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회원들

의 이러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소통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조직 운영에 대한 문항별 차이는 <표 4>와 같다. 9개 문항 가운데 i)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의 조직참여에 부정적($t=4.34$, $p<.001$), ii) 조직발전을 위해 모국정부의 재정적 지원필요($t=-2.22$, $p<.05$), iii) 예산집행의 투명성($t=3.39$, $p<.01$), iv)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t=2.93$, $p<.01$) 등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개 항목에서 iii)을 제외하고는 민단의 평균점이 높았으며, 민단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더 긍정적이었다. 조직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문항을 중심으로 두 집단의 차이를 보았다.

<표 4> 민단과 재일한인회 조직 운영 비교

변인	집단	N	M(SD)	t
조직의 임원진 선출방식이 합리적이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3.25(.69) 3.15(.87)	.99
조직의 단세가 약화되고 있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3.42(.93) 3.39(1.00)	.24
현재의 조직운영에 만족한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2.92(.62) 2.74(.90)	1.67
조직발전을 위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3.98(.63) 4.11(.74)	-1.32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단절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3.26(.83) 3.18(.96)	.71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의 조직참여에 부정적이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2.63(.81) 2.11(.93)	4.34***
조직발전을 위해 모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3.88(.58) 4.09(.77)	-2.22*
예산집행이 투명하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3.51(.68) 3.16(.82)	3.39**
조직은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	민단 재일한인회	106 102	3.14(.67) 2.84(.79)	2.93**

* $p<.05$ ** $p<.01$ *** $p<.001$

먼저 ‘일본 국적 동포의 조직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민단 2.63점으로 재일한인회의 2.1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단 회원들은 울드커머 혹은 그들의 후손으로서 재일동포들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포들의 일본 국적의 취득에 긍정적이지 않으며, 현재 민단 지도부의 임원진 및 일반 회원의 대다수는 한국 국적 보유자이다. 물론 민단은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는 귀화 동포의 민단 참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단 회원들은 일본에 대한 반발과 저항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즉 회원들이 일본에 정주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소유권 주장, 재일동포 처우 개선에 대한 비협조 및 차별과 박해, 지방참정권 주장에 대한 반대 등을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반면에 뉴커머 단체인 재일한인회원의 경우, 울드커머와 비교하여 일본에서 편견, 차별과 박해의 경험이 적은 관계로 일본 국적 취득자에 대한 반감이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 대해 민단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왔다.

‘조직 발전을 위한 모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민단은 평균 3.88, 재일한인회는 4.09로 재일한인회가 높게 나왔다. 민단 회원의 경우, 세대별로 월 1,000엔의 회비를 내고 있으며, 민단은 모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 및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한인회는 일반 회원으로부터는 월 회비를 받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이사, 위원장, 이사장 및 회장 등 임원진의 월비 및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는 2012년 400만 엔을 지원받아 단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재일한인회 입장에서 보면 뉴커머를 대표하는 단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민단 3.51, 재일한인회 3.16으로 민단의 평균이 더 높게 산출되었다. 두 조직 회원들의 긍정 빈도는 민단 50%, 재일한인회 32.3%이다. 민단 회원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단은 외교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회원들은 예산 집행의 세

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감찰위원회의 '이상 없다'는 예산 보고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민단의 예산 집행 투명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재일한인회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집행의 투명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조직의 회원 의견 수렴'을 보면 민단 3.14, 재일한인회 2.84로 민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민단 조직은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지방본부 그리고 그 산하에 지부-분단-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재일한인회는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회장단과 사무국 구조이다. 이런 점에서 민단의 조직 체계는 가장 기층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구조인 반면에 재일한인회의 조직 구조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 결과, 민단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조직 운영에서 중요 요인 중 하나는 회원들의 참여와 독립적인 재정의 확보이다. 회원들의 조직 참여를 높이려면 임원진 선출에 대한 투표권의 행사, 단체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임원진 선출과 관련하여 민단은 1,219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단장, 감사,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단 선거인단의 대표성은 0.38%이다. 재일한인회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회장, 감사, 이사장을 선출한다. 임원진 선출에서 회원들의 직접 참여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단은 재정자립의 독립성과 선거제도의 개선, 재일한인회는 회원의 충원과 재정자립도의 제고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할 시점이다.

민단과 재일한인회 임원진 선출 방식의 차이는 회원 수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민단은 32만 명, 재일한인회는 8천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조직의 경우, 임원진 선출을 간선제로 운영하는 경향이 많았다.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의 '임원진' 선출에 대한 조사에서 민단은 긍정 34.0%, 보통 57.5%, 부정 8.7%로 나타났다. 재일한인회의 경우, 긍정 36.2%, 보통 43.1%, 부정 20.6%이다. '보통' 응답자를 현재의 임원진 선

출에 대한 현상유지로 유추한다면, 두 조직의 긍정 수치는 비슷하다. 그러나 부정적 반응은 재일한인회원들이 민단에 비해 훨씬 높게 나왔다. 재일한인회장은 현재까지 7명이 선출되었지만, 2명 이상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경선하지는 않았다. 모두 단독 출마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물론 회장의 단독 출마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당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일한인회가 신생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일한인회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주요 인사들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을 추천 형식으로 결정하여 이를 내부에서 여론화함으로써 회장 경선이 활발하지 않다. 바로 이런 점에서 회원들은 임원 선출에 높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 주었다.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의 ‘조직의 임원 선출,’ ‘단체의 약화,’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 ‘개혁의 지속성,’ ‘의사소통의 단절’ 등 5개 문항에서는 두 단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4개 문항에서 민단 3개, 재일한인회는 1개 문항에서 회원들의 인식이 비교우위로 나타났다.

IV. 결론

2006년 민단 하병옥 단장과 조총련 서만술 의장의 만남과 교류는 민단 내부에서 보수 및 지방본부의 반발로 일시에 민단 조직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하병옥 단장의 사퇴와 정진 단장의 취임으로 5.17 사태는 수습되었고, 민단과 조총련의 ‘화해 공동성명’은 무산되었다. 이 같은 혼란 외에도 최근에는 민단 중앙본부와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한상련)’ 간 갈등이 표출하였다. 2011년 한상련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민단 산하단체로부터 이탈하였다. 민단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에 두 단체 대표는 한상련의 민단 산하단체 복귀, 한상련의 자주적 운영을 존중한다는 합의안

을 도출하여 갈등을 봉합하였다. 이후 민단 조직은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직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재일한인회 또한 조직 운영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제6대 백영선 회장의 취임 이후, 신 집행부가 박재옥 전 회장과 함께 구 집행부를 배제하면서 신·구 집행부 간 반목이 표출되었다. 구 집행부의 재일한인회 참여 거부, 일부 회원들의 탈퇴 등으로 내홍을 치르면서 백영선 회장의 중도 사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 등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였다. 현재는 김옥선 이 사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일한인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김 회장 체제가 당면한 과제는 전·현직 임원간의 갈등 해소, 탈퇴 회원들의 복귀 등이다. 김옥선 회장의 취임 이후, 구 집행부 임원들의 재일한인회 참여 및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재일한인회 또한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조직의 약화에 대해 민단 회원의 80%, 재일한인회는 50%가 동의하고 있었다. 조직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과 단체 활동을 위한 모국 정부의 지원은 민단과 재일한인회 공히 80%로 나타났다.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관건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시스템 구축, 조직의 정체성 홍보 및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영입, 독립적인 재정의 확보이다. 첫째, 두 단체 회원들 모두는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반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단의 경우,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선거인단이 민단 중앙의 3기관장을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금권선거의 횡행, 관동지역의 중앙본부가 동포수의 2배에 달하는 관서지역을 지배하는 민단 조직 구조의 비합리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13, 114). 그러므로 2006년에 도입한 선거인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즉 현재의 선거인단수 보다 더 많은 선거인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이나 아니면 민단 회원 모두가 직접 3기관장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일한인회 또한 단독 출마 및 선거에 의해 회장이 선임되었다. 보다 많은

후보자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경쟁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단과 재일한인회 선거제도의 개선은 조직의 의사소통 단절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단 회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¹⁴⁾ 재일한인회 또한 회원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기존 회원의 탈퇴나 미 참여, 신규 회원의 충원 미비는 조직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현재의 조직 활동은 집행부 중심의 명목상 단체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선행 요건은 조직 생존의 '정당성'과 그 조직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즉 신념체계와 가치지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입 회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기존 회원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신규 회원의 충원과 관련하여 기존 회원의 추천도 필요하지만, 신입 회원 스스로의 필요성과 참여 동기에 의한 회원 가입은 조직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규 회원에 대한 후견인 제를 도입하여 초기의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재정자립도의 상황이다. 민단은 매년 한국정부의 지원금 78억 원을 상근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민단의 대외 활동비는 집행부 및 이사들의 찬조금과 기탁금, 민단 자산의 운영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를 납부받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한인회는 회원들의 월 회비를 받고 있지 않으며, 집행부 및 이사들의 회비, 기탁금,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민단에 대한 모국 지원금의 집중은 민단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일한인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재외 한인회로부터 지원금 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단은 모국정부의 지원금 축소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회원들의 세대 당 월 회비 납부를 회원 1인당 납부로 전환

14) 1980년 377,893명, 1990년 452,875명, 1995년 506,233명, 2004년 404,000명, 2009년 383,057명(지충남 2010, 203), 2013년 현재 약 320,000명이다.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재일한인회는 회원들의 월 회비 면제 방식을 납부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회원의 기본 의무인 월 회비 면제는 소극적 참여와 조직 관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단은 전국에 걸쳐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재일한인회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뉴커머 한인회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민단과 재일한인회 집행부는 과거에 비해 현재는 활발한 단체 교류 및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생활자 단체, 친한 성향, 재일동포를 위한 대외 활동의 전개, 재일동포와 일본인 간 공존공생의 추구, 한국 국적 보유자 중심의 조직 활동이라는 공통점 있지만, 올드커머 대 뉴커머, 한·일 간의 민감 사안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대처라는 차이가 나타났다. 예컨대, 민단의 대외활동을 보면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토 대지진에서 조선인 학살 등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이나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채택 불허나 철회를 요청하는 요망서 제출 혹은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특별 영주자 동포의 재입국 허가제 적용 면제, 지문날인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항의 시위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반면에 재일연합회는 민단의 이 같은 항의나 요망서 전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재일연합회 회원 중 일부가 신주쿠에서 자영업을 하는 관계로 집행부는 한일 간의 민감 사안에 소극적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일본 우익의 신주쿠 코리안 타운에서의 혐한(嫌韓) 시위로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아무런 제스처(gesture)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 사회 및 정치권에 대한 재일동포의 영향력 확대, 친한 성향 조직의 일원화된 한인회 구축, 단체 간 통합의 유용성 등을 고려한다면,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지충남 2013a, 97-98). 두 조직의 통합은 민단과 재일한인회 간 경쟁의 지양, 민단 조직의 고령화 문제 및 젊은 세대의 회원 영입, 일본 우익의 혐한 시위 대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

의 새로운 동력원 확보 등 조직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민
단과 재일한인회 집행부는 눈앞의 적은 실리보다는 ‘재일동포 전체 이익’
을 위한다는 대의적 명분으로 조직 간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투 고 일 : 2013년12월31일]

[심사완료일 : 2014년01월26일]

[게재확정일 : 2014년01월27일]

참고문헌

- 강희봉 (Kang, Hui-bong). 2008. “총련과 민단의 조국통일.” (Chongryon-gwa Mindan-ui Jogugtongil) 『2008 도쿄 제9회 세계한민족포럼 논문집』(2008 Tokyo Je 9hoe Segye Hanminjok Forum Nonmunjip): 190-195.
- 곽진오 (Kwag, Jin-o). 2007. “일본에서의 통일운동: 전후 초기 일본에서의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 (Ilbon-eseoui Tongil Undong: Jeonhu Chogi Ilbon-eseoui Tongil Undong-e Gwanhan Yeongu) 『통일연구』(Tongil Yeongu) 11(1): 91-110.
- 경향신문 (Kyunghyang Sinmun). 2013. “재특회, 유치 확정되자마자 협한시위 재개.” (Jaeteukhoe, Yuchi Hwakjeongdoejamaja Hyeomhan Siwi Jaegae) 『경향신문』 (Kyunghyang Sinmun) (9월 9일).
- 고미혜 (Ko, Mi-hye). 2013. “재일민단,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보조금 회계처리.” (Jaeil Mindan, Jumeokgugusik-euro Jeongbu Bojogeum Hoegye Cheori) 『연합뉴스』 (Yonhap News) (3월 5일).
- 김영의 (Kim, Yeong-ui). 2011. “재일동포 사회의 협력과 갈등연구: 민단 총련의 관계를 중심으로.” (Jaeil Dongpo Sahoe-ui Hyeomnyeok-gwa Galdeung Yeongu: Mindan Chongryon-ui Gwangye-reul Jungsim-euro)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Goryeo Daehaggyo Seogsa Hagwi Nonmun).
- 김웅기 (Kim, Ung-gi). 2009. “두 개의 참정권 사이에서 재일한국인의 고민과 선택.” (Du Gae-ui Chamjeonggwon Sai-eseo Jaeil Hangukin-ui Gomin-gwa Seontaek) 『한민족연구』(Hanminjok Yeongu) 8: 1-28.
- 김태기 (Kim, Tae-gi). 2000. “한국정부와 민단의 협력과 갈등관계.” (Hanguk Jeongbu-wa Mindan-ui Hyeomnyeok-gwa Galdeung Gwangye) 『아·태지역연구』(A·tae Jiyeok Yeongu) 3(1): 60-97.
- 김태기 (Kim, Tae-gi). 2003. “분단의 갈등을 넘어 통일의 민족단체로.” (Bundan-ui Galdeung-eul Neomeo Tongil-ui Minjok Danche-ro) 한일민족문제학회 편 (Hanil Minjok Munje Hakhoe ed.),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Jaeil Joseonin Geudeul-eun Nuguinga), pp. 38-49. 서울(Seoul): 삼인(Samin).

- 김태기 (Kim, Tae-gi). 2010. “일본민주당과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하토야마 유키오의 의욕과 좌절.” (Ilbon Minjudang-gwa Jaeil Yeongju Oegugin-ui Jibang Chamjeongkwon: Hatoyama Yukio-ui Uiyok-gwa Jwajeol) 『한일민족문제연구』 (Hanil Minjok Munje Yeongu) 19: 235-277.
- 마쓰다 도시히코 (松田利彦 Matsuda, Dosihiko). 2013. “재일코리안과 뉴커머 문제.” (Jaeil Korean-gwa New Comer Munje)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편 (Cheongam Daehakgyo Jaeil Korean Yeonguso ed.).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Jaeil Korean Diaspora-ui Hyeongseong), pp. 359-382. 서울(Seoul): 선인(Seonin).
- 박병헌 (Park, Byeong-heon). 2007.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을 멈춰서서』(Sum Gappeuge Dalyeoon Gil-eul Meomchwo Seoseo). 서울(Seoul): 재외동포재단(Jaeoe Dongpo Jaedan).
- 박일 (Park, Il). 전성곤(Jeon Seong-gon) 옮김(trans.). 2005.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 재일한국인』((Chai-wa Pyeongdeung-ui Dilemma) Jaeil Hangukin). 서울(Seoul): 범우(Beomu).
- 변화영 (Byeon, Hwa-yeong). 2011. “자이니치의 경험과 기억의 서사: 원수일의 ‘아카이노 이야기’를 중심으로.” (Jainichi-ui Gyeongheom-gwa Gieok-ui Seosa: Won suil-ui ‘Akaino Iyagi’-reul Jungsim-euro) 『현대문화이론연구』(Hyeondae Munhwa Iron Yeongu) 45: 211-236.
- 서울신문 (Seoul Sinmun). 2013. “민단 상공인들, 한인사회 주도권 다툼.” (Mindan Sanggongindeul, Hanin Sahoe Judogwon Datum) 『서울신문』(Seoul Sinmun) (7월 6일).
- 성기중 (Seong, Gi-jung). 2007. “재일본 대한민국민단의 과제 및 해결방향.” (Jaeilbon Daehanminguk Mindan-ui Gwaje Mit Haegyeol Banghyang) 『국제정치연구』 (Gukje Jeongchi Yeongu) 10(1): 1-29.
- 야마다 쇼지 (山田昭次 Yamada, Syo-ji). 정선태(Jeong, Seon-tae) 옮김(trans.). 2003. 『카네코 후미코』(Kaneke Humiko). 서울(Seoul): 산처럼(Sancheoreom).
- 오정근 (Oh, Jeong-geun). 2013. “일본과 성장률 비교나 하고 있을 때인가?” (Ilbon-gwa Seongjangnyul Bigyo-na Hago Isseul TTaeinga?) 『서울신문』(Seoul Sinmun) (7월

30일).

- 윤성석 (Yun, Seong-seok) 외(Oe) · 2006. 『재외한인의 단체활동과 의식실태』(Jaeoe Hanin-ui Danche Hwaldong-gwa Uisik Siltae). 서울(Seoul): 북코리아(Bookkorea).
- 이승하 (Lee, Seung-ha). 2012. “재일교포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민단 · 조총련 간의 갈등양상.” (Jaeil Gyopo Jakga-ui Soseol-e Natanan Mindan · Jochongryon Gan-ui Galdeung Yangsang) 『한국문예창작』(Hanguk Munye Changjak) 11(2): 369-398.
- 이종원 (Lee, Jong-won). 2004. “재일동포 사회와 남남갈등.”(Jaeil Dongpo Sahoe-wa Namnam Galdeung)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Namnam Galdeung Jindan Mit Haeso Bangan): 189-200.
- 임영언 (Lim, Yeong-eon) · 허성태 (Heo, Seong-tae). 2010. “청년 실업자들의 일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민단의 역할과 방안.” (Cheongnyeon Sireopjadeul-ui Ilbon Chwieop Hwalseonghwa-reul Wihan Mindan-ui Yeokhal-gwa Bangan) 『디아스포라연구』(Diaspora Yeongu) 4(2): 135-167.
- 임채완 (Lim, Chae-wan) 외(Oe). 2007. 『재외한인 단체의 형성과 현황』(Jaeoe Hanin Danche-ui Hyeongseong-gwa Hyeonhwang). 서울(Seoul): 집문당(Jipmundang).
- 임채완 (Lim, Chae-wan) 외(Oe). 2008. 『재외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Jaeoe Hanin Sahoe Danche Network). 서울(Seoul): 북코리아(Bookkorea).
- 임형백 (Lim, Hyeong-baek). 2013. “일본 교포단체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대립과 쇠퇴.” (Ilbon Gyopo Danche-ui Hyeongseong-gwa Seongjang Geurigo Daerip-gwa Soetoe) 『재일동포사회의 남북 분단과 통일』(Jaeil Dongpo Sahoe-ui Nambuk Bundan-gwa Tongil): 43-56.
- 재외동포신문 (Jaeoe Dongpo Sinmun). 2012. “민단 신임 단장에 오공태 부단장 선출.” (Minda Sinim Danjang-e Oh, Gong-tae Budanjang Seonchul) 『재외동포신문』(Jaeoe Dongpo Sinmun) (2월 24일).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Jaeilbon Daehanminguk Mindan). 2002. “민단 조직현황.” (Minda Jojik Hyeonhwang)
<http://www.mindan.org/kr/shokai04.php>(검색일: 2013.04.10)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Jaeilbon Daehanminguk Mindan). 2004. “민단 단세현황.” (Mindan danse Hyeonhwang)
<http://www.mindan.org/kr/sosoki04.php>(검색일: 2013.04.10).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Jaeilbon Daehanminguk Mindan). 2010. “민단의 주요활동.” (Mindan-ui Juyo Hwaldong)
<http://www.mindan.org/kr/jigy02.php>(검색일: 2013.04.10).
- 재일본한국인연합회 (Jaeilbon Hangukin Yeonhaphoe). 2007. “회칙.” (Hoechik)
http://www.haninhe.com/korean/sub_kaisoku.php(검색일: 2013.04.28).
- 재일본한국인연합회 (Jaeilbon Hangukin Yeonhaphoe). 2011. “재일한국인연합회 조직안내.” (Jaeil Hangukin Yeonhaphoe Jojik Annae) 『韓人會』(Haninhoe): 12.
- 정갑수 (Jeong, Gap-su). 2000. “정상회담 이후 재일동포사회의 화해 · 협력: 민단 · 조총련 간의 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Jeongsang Hoedam Ihu Jaeil Dongpo Sahoe-ui Hwahae Hyeopnyeok: Mindan Jochongryon Gan-ui Hwahae-wa Hyeopnyeok-eul Jungsim-euro) 『통일문제연구』(Tongil Munje Yeongu) 12(1): 25-40.
- 정몽주 (Jeong, Mong-ju). 2008. “재일동포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금후의 과제.” (Jaeil Dongpo Sahoe-ui Eoje-wa Oneul Geurigo Geumhu-ui Gwaje) 『2008 교포정책 포럼』(2008 Gyopo Jeongchaek Forum): 1-13.
- 정진룡 (Jeong, Jin-ryong). 1984. “집단기능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 활동을 중심으로.” (Jipdan Gineung-ui Baljeon Jeolyak-e Gwanhan Yeongu: Jaeilbon Daehanminguk Georyu Mindan Hwaldong-eul Jungsim-euro) 단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Danguk Daehakgyo Baksa Hakwi Nonmun).
- 정진성 (Jeong, Jin-seong). 2009. “민단-총련 관계의 변화.” (Mindan-Chongryon Gwangye-ui Byeonhwa) 『사회와 역사』(Sahoe-wa Yeoksa) 82: 283-321.
- 지충남 (Ji, Choong-nam). 2008a. “민단과 조총련의 상생네트워크 모색.” (Mindan-gwa Jochongryon-ui Sangsaeng Network Mosaek) 『2008 도쿄 제9회 세계한민족포럼 논문집』(2008 Tokyo Je 9hoe Segye Hanminjok Forum Nonmunjip): 215-230.
- 지충남 (Ji, Choong-nam). 2008b. “재일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연구: 민단, 조총련, 재일 한인회를 중심으로.” (Jaeil Hanin Sahoe Danche Network Yeongu: Mindan,

- Jochongryon, Jaeilhaninhoe-reul Jungsim-euro) 『세계지역연구논총』(Segye Jiyeok Yeongu Nonchong) 26(1): 57-93.
- 지충남 (Ji, Choong-nam). 2010. “단체(團勢) 약화 요인과 활성화 방안: 민단을 중심으로.” (Danse Yakhwa Yoin-gwa Hwalseong-hwa Bangan: Mindan-eul Jungsim-euro) 『한국동북아논총』(Hanguk Dongbuka Nonchong) 15(2): 189-214.
- 지충남 (Ji, Choong-nam). 2013a. “민단과 재일한인회의 단체 활동 비교.” (Mindan-gwa Jaeil Haninhoe-ui Danche Hwaldong Bigyo) 『대한정치학회보』(Daehan Jeongchi Hakhoebo) 21(3): 71-100.
- 지충남 (Ji, Choong-nam). 2013b. “재일동포 사회의 제3의 민족통일운동 고찰.” (Jaeil Dongpo Sahoe-ui Je 3-ui Minjok Tongil Undong Gochal) 『한국동북아논총』(Hanguk Dongbuka Nonchong) 18(4): 121-144.
- 진회관 (Jin, Hui-gwan). 2003.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Bukhan-gwa Jochongryon-ui Gwangye Byeonhwa Mit Mindan-Jochongnyeon Gwangye Gaeseon Bangan Mosaek) 『통일문제연구』(Tongil Munje Yeongu) 15(1): 127-155.
- 진회관 (Jin, Hui-gwan). 2006. “민단과 총련, 이제는 화합으로.” (Mindan-gwa Chongryon, Jje-neun Hwahap-euro) 『KNSI 현안진단』(KNSI Hyeonan Jindan) 32: 1-8.
- 진회관 (Jin, Hui-gwan). 2009. “분단정부와 민단, 총련.” (Bundan Jeongbu-wa Mindan, Chongryon) 국사편찬위원회 (Guksa Pyeonchan Wiwonhoe) 편 (ed.), 『일본 한인의 역사 (上)』, (Ilbon Hanin-ui Yeoksa (Sang)) pp. 211-239. 과천(Gwacheon): 국사편찬위원회(Guksa Pyeonchan Wiwonhoe).
- 최영호 (Choi, Yeong-ho). 2004. “재일한국인의 일본 지방참정권, 그 현황과 전망.” (Jaeil Hangukin-ui Ilbon Jibang Chamjeongwon, Geu Hyeonhwang-gwa Jeonmang) 『21세기정치학회보』(21 Segi Jeongchi Hakhoebo) 14(3): 121-146.
- 최영호 (Choi, Yeong-ho). 2013. “해방직후 재일동포사회의 좌우대립.” (Haebang Jikhu Jaeil Dongpo Sahoe-ui Jwau Daerip) 『재일동포사회의 남북분단과 통일』(Jaeil Dongpo Sahoe-ui Nambuk Bundan-gwa Tongil): 7-21.
- 최진욱 (Choi, Jin-uk) 외(Oe). 2004.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 (Dongbuka Hanminjok Sahoe-ui Yeoksa-jeok Hyeongseong Gwajeong Mit Siltae). 서울(Seoul): 통일연구원(Tongil Yeonguwon).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Haeoe Gyopo Munje Yeonguso). 2013. 『재일동포사회 단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방안』(Jaeil Dongpo Sahoe Danhap-gwa Jasaengnyeok Hwakbo-reul Wihan Mirae Baljeon Bangan). 서울(Seoul): 재외동포재단(Jaeoe Dongpo Jaedan).
- 在日本大韓民國民團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1984. 『差別白書: 第7集』(Sabetsu Hakusyo: Dai Nanasyuu). 東京 (Tokyo): 在日本大韓民國民團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 在日本大韓民國民團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2006. 『宣言・綱領・規約』(Sengen · Kouryou · Kiyaku). 東京(Tokyo):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Chuuou Honbu).
- 在日本大韓民國民團 編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ed.). 1997. 『民團 50 年史』(Mindan Gojyuunenshi). 東京 (Tokyo): 在日本大韓民國民團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 在日本大韓民國民團在日韓國人意識調査委員會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Zainichi Kankokujin Ishiki Chousa Iinkai). 2001. 『在日韓國人意識調査中間報告書』(Zainichi Kankokujin Ishiki Chousa Chuukan Houkokusyo). 東京 (Tokyo):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Chuuou Honbu).
-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Chuuou Honbu). 1998. 『韓國民團50年の歩み』(Kankoku Mindan Gojyuunen no Ayumi). 東京 (Tokyo):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Chuuou Honbu).
-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Chuuou Honbu). 2005. 『第58回定期中央委員會 2004年 報告書』(Dai Gojyuuwachikai Teiki Chuuou Iinkai Nisenyonon Houkokusyo). 東京 (Tokyo):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Chuuou Honbu).
-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組織局 (Zai Nippon Daikanminkoku Mindan Chuuou Honbu

Soshikikyoku). 1996. 『Q&A100 北韓・總連—韓國民団は、いま、こう考えている』
(Q&A Hokkan・Souren—Kankoku Mindan ha Ima Kou Kangaeteiru). 東京
(Tokyo): 伍月書房(Satsuki Syobou).

徐龍達 (Jo, Eitatsu). 1992. 『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Teijyuu Gaikokujin no Chihou
Sanseiken). 東京 (Tokyo): 自由評論社 (Jiyuuhyouronsha).

鄭哲 (Tei, Tetsu). 1967. 『民團』(Mindan). 東京 (Tokyo): 洋々社 (Youyousha).

統一日報編輯部 (Touitsu Nippou Hensyuubu). 2006. 『民團・總連の 和解のウラで 何か起
っていたのか?』(Mindan・Souren no Wakai no Ura de Nani ga Okotteitanoka?).
東京 (Tokyo): 洋泉社 (Yousensha).

仲原良二 (Nakahara, Ryouji). 2000. 『知っていますか? 在日外國人と參政權』(Sitteimasuka?
Zainichi Gaikokujin to Sanseiken). 東京 (Tokyo): 解放出版社 (Kaihou
Syuppansha).

八・一三裁判記録再刊委員會 (Hachi・Ichisan Saiban Kiroku Saikan Iinkai). 2006. 『畏』
(Wana). 東京 (Tokyo): 晩聲社 (Banseisha).

朴慶植 (Boku, Keisyoku). 198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Kaihogo Zainichi Chousenjin
Undoushi). 東京 (Tokyo): 三一書房 (Sanichi Syobou).

朴炳憲 (Boku, Heiken). 2011. 『私の歩んだ道』(Watashi no Ayunda Michi). 東京 (Tokyo):
新幹社 (Shinkansha).

李瑜煥 (Ri, Yukan). 1971. 『在日 韓國人 60萬-民團・朝總聯の 分裂史と 動向』(Zainichi
Kankokujin Rokujyuman-Mindan・Chou Souren no Bunretsushi to Doukou).
東京 (Tokyo): 洋洋社 (Youyousha).

李瑜煥 (Ri, Yukan). 1980. 『日本の中の三十八度線—民団・朝總連の歴史と現實』(Nihon
no Naka no Sanjyuhachidosen-Mindan・Chou Souren no Rekishi to Genjitsu).
東京 (Tokyo): 洋々社 (Youyousha).

ABSTRACT

Review on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ith Priority Given to Mindan and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JI Choong-Na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also referred to as Mindan) was compared with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Japan in terms of nine items abou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organizational satisfaction of the members. First, Mindan had a nationwide network, whereas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Japan was primarily based in Tokyo. There were common denominator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 that both were Korean-friendly, did external activities for the sak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sought after coexistence and coliving between Korean residents and Japanese people, and mainly consisted of those who had the Korean nationality. They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only in two regards. The former was composed of oldcomers, and the latter consisted of newcomers. And the former coped with sensitive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an active way, and the latter did it in a passive way. Second, whe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members of the two organizations was analyze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our items: whether to look at the participation of Korean residents who were naturalized in Japan in a negative manner or not, awareness on the necessity of financial aid from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ould be necessary for organizational development, awareness on the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and whether their opinions were well reflected in organizational policy setting or not.

Third, the key factor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organizations were to recover broken communication channels, to publicize the identity of the organizations, to keep attracting new members and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finance. Fourth, the two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usefulness of their unity to boost the influence of Korean residents on Japanese society and to create a Korea-friendly unified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That will serve to remove unnecessary competition, to solve the aging problem of Minclan, to attract the younger generations and to be of use for the acquisition of local election franchise, which will, in turn,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ir own reinforcement and revitalization.

Keywo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Japan, Organizational Activities